

# ‘중앙 정부-시·도교육청 협력하자’

### 시도교육감협,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축하 예방... 부총리 7월 서울총회 참석키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부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최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부총리를 예방했다.

이날 예방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부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감사)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이 참석했으며 교육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 학교정책실장, 지방교육지원국장, 대변인이 배석하였다.

김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을 바꾸어 오신 교육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과거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과 대립을 걷어내고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하는 한편 “중앙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에 김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시절 이끌었던 혁신 교육의 성과가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성공으로 이어

질 것”이라며 교육 개혁의 성공을 위해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향후 교육 개혁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고 부총리는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초청한 7월 서울 총회의 간담회 및 만찬에 참석하기로 했다. /정해은 기자

김광수 “박능후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해명”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본인의 실적을 위해 가로채기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을 촉구했다.

14일 김광수 의원실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보건사회연구(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학술지 2009년 12월호(29권 2호)에 제자 배모씨(당시 박사학위 논문 준비 중, 지도교수 : 박능후 후보자)와 공동저자로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한 달 후인 2009년 12월 공동저자였던 제자 배모씨는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최종 통과한다.

그런데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학술지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13일)과 12월에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검사를 한 결과(카피킬러) 표절률이 21%인 것으로 나타나 제자의 박사 논문을 가로채기해 학술지에 먼저 게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자의 박사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을 목인 또는 방조하고 최종 통과시킨 것이 가로채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 이에 대한 해명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통상 박사학위 논문은 통과(2009년 12월) 3~6개월전 지도교수에게 심사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대략 2009년 6월~9월(정확한 일시 자료요청 상태)에 제자 배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본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면서 자신의 연구성과를 위해 논문의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아무리 공동저자로 표시했다하더라도 논문 가로채기의 방식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박사학위 지도교수로서 한 달 전 발표된 본인의 논문과 유사한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표절여부 검증없이 통과시켜 준 것도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자칫 제자를 표절자로 만드는 비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논문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박사학위 논문 통과를 앞둔 제자의 논문을 자신의 연구성과를 위해 미리 학술지에 게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박 후보자는 이미 여러 논문에 대한 표절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후보자가 표절문제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5대원칙 위반이 비판을 받자 청와대는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전, 논문표절은 2008년 이전으로 새로운 세부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박 후보자가 이미 시인한 배우자의 위장전입은 2007년,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2009년 발생했다. /김진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한국당, 18일 추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논의된 결과를 얘기해 달라”는 요구에 “추경과 관련해 18일 본회의가 잡혀있으니 18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자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법도 18일 통과가 목표냐”는 질문에 “네,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진행하자는 얘기를 했다”며 “안행위는 내일(15일) 소집하자고 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소집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내일(15일)이 안 되면 모레(16일)부터 (연다)”고 부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에게 추경 수정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야당이 요구한 공무원 증원 취소 등은 “그런 얘기 없었다.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무총리가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 없었다. 예결위 밖에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박 원내수석이 대신 말했다.

그는 정 원내대표와 회동 내용에 대해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하기로 결정을 내서 우리로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얘기했다. 청와대 다녀온 뒷얘기도 했다”며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얘기를 담아서 결정을 낸 거니까 서로 이번 7월 임시국회를 잘해가자는 얘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지금 추경 임하기로 했다. 큰 원칙이 충족되는 전제하에 해서 추경이 정해진 날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때는 일정 차질도 사전에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했다. 박 대변인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 靑 “민정수석실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문건 발견”

###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300쪽 문건...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도 존재”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삼성그룹 승계 및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춘추관에서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의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로 설명됐다. 이 시기의 민정수석은 김영한 민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이다.

청와대는 이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람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지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고 본다”

며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들 자료에는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가 스크랩된 ‘국민연금의결권 관련 조사’ 제목의 문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펜으로 쓴 메모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 가운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되어있었다고 강조했다. 삼성 관련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될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의 메모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문건도 소개하면서 “문화예술계 건전화도 문화융성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선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등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등도 들어 있다”면서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계 압박 독소조항 개선 방안과 6월 지방선거 초반 관세 및 전망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며 자필 메모를 들어보이면서 “여기에는 ‘전교조의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등의 단체 연합 쪽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건에 나온 대리비 사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 송영우 “국방개혁 늦춰선 안돼”... 6대과제 제시

송영우 신임 국방부장관은 지난 14일 “후손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자주국방의 강군을 만들어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대 장관 취임식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군사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또한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제압할 수 있고, 주변국과 호혜적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며 “이러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 대비태세, 투명국방운영, 선진국 수준의 병영문화 창출을 위한 6가지 국방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부모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 문화 창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국군 건설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 ▲여군 인력 확대를 통한 전문성 증대와 근무여건 개선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책임국방 달성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포괄적 안보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뉴시스

## 남원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남원시**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